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

건설소방위원회

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. 감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,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도정시책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
- 도정주요사업 추진 상황의 감사, 조사, 현지확인을 통한 행정 수행 상 불합리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기능,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- **2. 감사기간** : '17. 11. 9.(수) ~ 11. 22.(화) 【14일간】
- **3. 감사 대상기관** : 7개 기관
 - 道 본 청(4) : 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소방본부

○ 출연기관(3) : 오송바이오진흥재단, 충북개발공사, 교통연수원

4. 감사반 편성

감사위원장	감 사 위 원	사무보조	
임 순 묵	이 광 진, 강 현 삼 김 봉 회, 박 병 진 장 선 배	수석전문위원 정일하 전문위원 백종현 전문위원 박대우 행정6급 이재순 행정7급 이재원 속기사 2명	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감 사 일 자	대상기관	감 사 장 소	비고
11. 13.(월)	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소방본부	현지확인(청주일원)	
11. 14.(화)	균형건설국, 교통연수원, 재난안전실, 충북개발공사	건설소방회의실	
11. 16.(목)	소방본부, 바이오환경국, 오송바이오진흥재단	건설소방회의실	
11.20.(월)~22(수)	감사결과 종합검토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	위원실 등	

6. 주요 감사내용

- 2016년 이후 감사원, 중앙부처,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-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-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 중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
-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실적이 저조한 사항
- 현안사업으로서 추진 상 문제점이 예상·발생된 사업
- 각종 지원 사업 중 부진사업 현황 및 추진대책
- 지역주민의견 (현장 확인 시)
- 각종 언론기관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도정시책 추진사항
- 대 집행부 질문·답변사항의 사후관리 실태
-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운영 중 지적된 사항
- 민원처리사항 등

7. 감사결과

가.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(6건)

【재난안전실: 1건】

- 1. 현재 CCTV업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음.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일원화 필요
 - ※ 어린이 보호구역, 도시공원CCTV (안전정책과) 도로방범, 생활방범CCTV (정보통신과)

【균형건설국: 2건】

- 1. 가금~북충주IC 국지도가 미준공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
- 2. 사업부서 공무원이 2~3건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현지 감독에 소홀해지는 근본적인 문제 지적,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감리 예산 확보

【바이오환경국: 1건】

1. 2018바이오코리아 오송역에서 개최토록 노력

【오송바이오진흥재단: 1건】

1. 오송바이오밸리 내 기관별·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미흡,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

【충청북도교통연수원: 1건】

1. 고3대상 청소년교통안전교육 도내 전 학교로 확대 실시

나. 건의 및 촉구사항 (44건)

【재난안전실: 14건】

- 1. E등급 판정을 받은 재난위험시설 거주민에 대해 이주 독려와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치된 비상물품 관리 철저
- 2. 금년도 예산 중 이월액 과다 발생, 예산관리 철저 이행
- 3. '17년도 자체감사 시 지적된 도비보조금 정산소홀 등 개선필요
- 4. 매년 행정사무감시 시 지적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이수율 저조에 대해 재난안전교부세 차등 교부 등 패널티를 반영하여 조기 이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
- 5.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해 예산 투입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 마련
- 6.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
- 7. 유도선 안전점검 시 일반적인 점검 이외에 기능적인 부분도 지도·점검
- 8. 도민 안전문화 교육관련 도내 전지역이 안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고 교육계층도 좀 더 다양화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
- 9. 북핵 공격 시 도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 효율적 관리와 북핵 재난매뉴얼을 제작하여 행동요령 및 생존배낭 구비 등의 대 도민 홍보방안 마련 요구

- 10.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전문성 강화 및 월간지 제작 보완
- 11. 저화질 CCTV 식별능력이 낮아 고화질 기기로 교체 요망
- 12. 4대강사업 시설물 이용도가 저조한 시설에 대하여 국토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정리 필요
- 13. 심정지 사망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초기 대응체계가 미흡하여 생존률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요구, 심정지 환자 대응은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재난안전실이 총괄하는 역할 필요
- 14.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 노력 필요

【균형건설국: 8건】

- 1.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이 진척없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절충안을 마련해 주민불편 최소화
- 2. 대형사고 참사 위험성 내재한 제천 청풍교를 조속한 시일 내 철거 촉구
- 3. 자가용자동차 불법 유상 운송행위 단속 강화
- 4. 단양 영월이 지역수요 맞춤지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, 향후 도내 지역간 연계사업이 추진 선정될 수 있도록 발굴 노력
- 5. 3단계 균형발전 공모사업 관련, 시군과 도의 균형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상대방의 입장 이해 및 존중 필요

- 6. 드론 구입목적에 맞게 토지정보 업무에만 사용하고 일반행사 지원 자제 노력
- 7. 지역균형발전사업 기본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
- 8. 중앙정부, 시·군과 공조하여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 노력

【바이오환경국: 10건】

- 1. 청주시는 청주전시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음. 당초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
- 2. 청주전시관 건립 관련 청주시와의 예산분담 및 운영문제, 행정절차 이행 등 청주시와 소통하여 도의 일방적 추진이 되지 않도록 노력
- 3. 2017 바이오코리아가 작년대비 개최실적이 저조, 예산대비 효용성이 없는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계획 수립하여 미래 성장성이 엿보이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개선 촉구
- 4. 오송첨복단지 원형지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분양 촉구
- 5.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가 충북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 모색
- 6.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 관련,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
- 7.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필요

8.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해외 바이어 수출계약 내역 중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음.

제품수주 등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요구

9.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환경문제로 타시도의 경우 별도 환경국을 두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,

우리 도는 그렇지 않아 조직개편 시 별도의 국을 편성하도록 촉구

10.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면 노후관 교체량보다 누수율 발생량이 많음

시군에서 적극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

【소방본부: 8건】

- 1.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 철저
- 2. 소방헬기 운영방식 관련 효율적인 방안 마련
- 3.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률 저감을 위한 대책 강구
- 4.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력 확보 추진
- 5. PTSD(외상후 스트레스 장애)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심신안정실 운영보다는 자체예산을 확보해 각 관서별로 전문상담사 운영 필요
- 6. 2018세계소방관경기대회가 충북에 유치된 것을 도내 소방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
- 7. 소방관서 내진성능평가 시행과 지진대비 대응훈련 추진

8. 재난안전체험관 규모 축소에 대해 사업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모색

【충북개발공사: 3건】

- 1. 도가 직접 수행할 사업까지 과다하게 위·수탁 시행, 적극적인 자체사업 발굴 필요
- 2. 공사 주요사업이 산업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에 편중되어 있음. 향후 공익사업 적극 추진
- 3. 감사원 지적사항(산척산단 설계변경 소홀 등) 재발방지 및 관련법 준수

【충청북도교통연수원: 1건】

1. 고령운전자 안전제고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 강구